

담양 농업의 미래를 묻다

담양군, 농업유관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WTO 개도국 지위포기 등에 따른 방안 모색



담양 농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유관기관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담양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농업 관련 부서를 비롯해 농업인과 단체, 농·축협, 산림조합 등 농업 유관기관 실무진, 전문가 등 29명이 모여 농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국제정세 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업관련 부서, 농업인과 단체를 비롯해 농·축협, 산림조합 등 농업 유관기관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담양식 농업상생발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담양식 농업상생발전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고 열린

첫 회의로 최근 농업분야의 화두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의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농업예산의 성과 분석과 주민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조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담양식 자치능정으로 농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의의 안전과 개최시기를 정하지 않고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해 누구든 안전을 상정하고 회의를 주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시적이고 규모가 큰 대응사업은 국제정세 흐름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따르기로 했다.

신성호 지속가능전략국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외 국제정세 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실무진이 모인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해남군, 로컬푸드 안정 공급체계 구축위한 농가 교육

오는 20일까지 실시...내년 1~2월 중 추가 교육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앞두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한다.

해남군은 2일부터 20일까지 해남군 2030 푸드플랜 기반 조성을 위한 참여농가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완주로컬푸드 성공신화를 이끌었던 안대성 대표와 이옥근 전 완주 은고을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해남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중 교육은 소규모 이중하우스 사업 농가와 해남읍, 삼산, 화산, 현산, 옥천, 계곡, 마산면 생산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 1~2월에는 송지, 북평, 화원 등지에서 추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해남군 로컬푸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기본 작부체계와 연간 출하 계획을 세워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획생산 계획서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집합교육 외에도 마을 및 농가 방문교육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중·고령농들이 차질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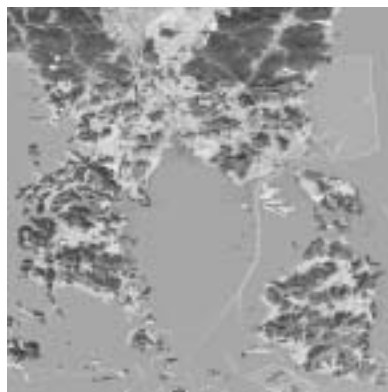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역생산기반 구축,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직매장 개장을 목표로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계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농과 고령농, 가족농 등 소규모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농가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틀이 될 푸드플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서명환 기자

여수시,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동 대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술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골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울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에 발효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반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해왔다.

여수=김도현 기자

득량면 도촌리, '우리동네 가꾸는 보성600 사업'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 목표



보성군은 깨끗한 보성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우리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득량면 도촌

리 대화마을에서는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 득량면장은 마을주민들에게 사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주관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개선 우수분야에 입상한 타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임동영 이장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마을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우리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할지 논의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임오모 득량면장은 "도촌1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정신은 보성군의 으뜸마을로 득량면의 1등 마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향후 더 많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좀 더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영광군, 공공급식관련 시설채소 재배생산 발돋움

영광군은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우스 채소 재배농가 및 재배희망 농가 25명과 공공급식관련 시설채소 작목 협의회를 추진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급식 추진상황과 현재 관내 농가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신선채소 재배 생산의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농가

의 연중 생산능력을 배양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협의회 참석자는 "시설채소 재배농가들과 연중 신선채소 재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공급과 수요 맞춤형 농산물(시설채소) 생산과 판로 확보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기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내 시설채소 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직거래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공급식 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